

제18대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적절한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경제도 빠른 속도로 성장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세 명의 대선 후보가 현재까지 발표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들을 비교·평가하여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비교·평가에 의하면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수의 정책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이 구체성이 결여되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정책들이다. 또한 일부 정책은 노동시장 전체의 역학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증요법(對症療法)적 규제일변도의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어 고용 유인(誘因)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가능성마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책은 정부, 기업, 노동조합,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등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 모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해당사자만을 보호하려 하거나 특정 이해당사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조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다. 미사여구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보다는 이미 개발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그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각 대선 후보 별 일자리 공약 비교·평가표>

		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공정경제)	안철수 (혁신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 방향		세 후보 모두 청년 일자리 창출 강조, 양보다 질 강조, 그러나 구체적 수치와 실현 방안을 밝히지 않음		
		<p>청년층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많은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늘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론 中)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 벤처 육성과 해외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청년 해외 취업기회 확대 및 장려금제도 도입 등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연구 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p>청년고용 의무할당제(법적 강제) 및 블라인드 채용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 3% 이상을 청년들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및 지방 인재 채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 해마다 전체고용자 가운데 3% 이상 청년을 고용 의무 • 공기업과 공무원의 지역우대 채용 • 각종 정부 지원의 지방채용 연동제 확대 • 세대 공존형 일자리 나눔 	<p>청년고용 특별조치법(법적 강제) 및 선순환 혁신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채용 의무화 및 기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추가 채용 ▶ 선순환 혁신 일자리 창출과 벤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 생태계 정비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소프트웨어와 문화콘텐츠에 대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투자멘토링제 구축) • 엔젤투자 등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공정경제)	안철수 (혁신경제)
평가	평가	기본적인 방향엔 공감하지만 실현성 제고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정책개발을 했던 분야로서 정책개발보다는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는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근로의지나 외국어 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 지속성이 결여되고 스펙 쌓기의 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보다는 친시장적 접근이지만 여전히 실현가능성이 낮음 (결국 기업과 공공기관에 강제로 할당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큼) 	시장기능을 무시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학력실업자가 많은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을 벤치마킹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됨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강제적인 할당은 경제 전체에 후생손실만 끼칠 뿐이며 청년실업자 중 고학력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커서 실효성이 없고 공정성도 결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대졸자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질을 높이는 것 세대 공존형 일자리의 기본 전제인 임금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음 	기본적인 방향엔 공감하지만 실현성 제고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강제적인 할당은 경제 전체에 손실만 끼칠 뿐이며 청년실업자 중 고학력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커서 실효성이 업고 공정성도 결여 임금조정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해외사례(독일, 프랑스)를 보아도 결국 실패할 것임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조정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업과 노조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실효성 제고 필요)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효율성이 떨어짐. 세제지원보다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경우 가능성 있는 창업에 대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짐
		세 후보 모두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 정책은 부족/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없음		
고령화·여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 자율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재정 및 세제 지원 같은 정책지원 ▶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정년 60세를 제도화하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정년연장을 추진, 법제화, 연령에 의한 취업 제한 점차 폐지 ▶ 취약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 고령자 일자리 제공 ▶ 직장, 생활 균형을 위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평가	기본적인 방향엔 공감하지만 실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 정년연장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원칙 때문에 노동조합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어려운 상황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의 유연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함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공감 	규제에 의존한 접근은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제도화는 기업과 노조간, 세대 간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이어서 법적 규제로 달성되기 어려움 정리해고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위축을 초래할 전망 	규제 의존도가 높고 구체성이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제도화는 기업과 노조간, 세대 간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이어서 법적 규제로 달성되기 어려움 대부분의 정책이 너무 이상적이고 구체적 추진 방법이 불명확

		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공정경제)	안철수 (혁신경제)
노동시장제도 개선	주요 정책	<p>세 후보 모두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음</p> <p>▶ 근로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근로자 보호법 제정 •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 하도급 근로자 법안 추진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정책 보완책 마련 • 대기업 비정규직 과도 사용 관행을 공시를 통하여 개선 <p>▶ 중소기업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제한 • 중소기업의 증견기업으로 성장지원정책 수립 • 증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 	<p>▶ 근로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과 일자리 “최소기준(최저 임금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확립 •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및 적용제의 축소 • 최저임금 조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확대 •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진과 기업지원의 연계 •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 •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취약계층에 지원 강화 • 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 •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공적고용지원서비스 강화 <p>▶ 중소기업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제 •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한 	<p>▶ 근로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평등기본법 제정(비정규직 남용방지) •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대기업 고용 관련 공시제도 실시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 노동시간 정책의 대폭강화 • 대통령 직속 일자리 국민합의 기구 설치 •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
	평가	<p><u>일부 정책은 시장원리에 역행</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은 과거 예처럼 또 다른 실업을 낳을 가능성이 큼 → 최저임금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고용형태별, 직종별 유연한 적용이 필요 • 비정규직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며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만 초래 →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되 임금 및 근로조건 측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성장지원정책이 부실 중소기업 퇴출을 정상적으로 달성한 경우는 없음.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면 부실기업의 퇴출을 우선 용이하게 해야 함 	<p><u>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대부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보호라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적 정책이 대부분 • 근로기준법 적용제의 축소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벗어나며 일괄적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 • 최저임금 인상은 과거 예처럼 또 다른 실업을 낳을 가능성이 큼 /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실업을 불러오고 결국 일자리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초래 •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은 노사의 자율에 맡겨야 할 과제 	<p><u>일부 정책은 규제 의존도가 높고 상당수 정책들의 구체성이 크게 결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가치노동이란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기업 등 생산물을 소비하고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로 구성된 시장이 결정하는 것임. 남녀간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 이외 다른 측면에서 활용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없음. 규제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강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용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이해당사자(기업, 노조, 실업자 등) 모두의 양보가 필요한 정책인데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음

		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공정경제)	안철수 (혁신경제)
신규 일자리 창출	주요 정책	세 후보 모두 새로운 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나 과거 정책과 차별성이 없고 구체적 실천정책이 결여		
		<p>▶ 창조경제론(Creative Economy)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성장기반 창출 : 경제성장률 지향 대신 고용률 지향</p> <p>① 국민행복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과 IT를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제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스마트워크 범 국가적 추진 <p>②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p> <p>③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창조정부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정보를 전면 개방, 지식정보산업 진흥을 유도 일자리 창출 <p>④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결합, 지식재산권 보호 대학에 창업기지 건설, 실버창업 교육센터 운영,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금융 지원 확대 <p>▶ 기타 일자리 추진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제고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래 산업 지원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p>▶ 4대 성장 전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p> <p>①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중심의 경제·산업정책 개편,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p>②창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BT/NT/ST/CT 등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육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연구역량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p>③ 생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투자,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사업, 생태 및 유기농업 등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p>④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청년과 퇴직자간 세대융합형 창직 지원 남북경제연합·동북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p>▶ 기타 일자리 추진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p>▶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p>▶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화협 추진 <p>▶ 기타 일자리 추진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녹색경제, 북방경제 시대의 신성장산업 개발 및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문화예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및 아시아 지역 문화허브 구축)
	평가	<p><u>구체성 결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창조경제라는 기본 방향에는 동감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구체적인 실천 정책이 없음 대부분의 정책들이 과거 제시되었던 정책들임 → 오히려 과거 정책실효성이 낮았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과제임 	<p><u>구체성 결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공감하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정책방향만 있고 구체성이 없음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며 실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p><u>구체성 결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화협을 추진할 필요성에는 공감.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일 뿐 장기적인 일자리창출 정책은 될 수 없음 다른 후보들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크게 결여됨